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반대 성명

4차 세계 민중건강총회, 방글라데시 사바르, 2018년 11월 15~19일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의 원칙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와 개인으로 구성된 우리는, 비밀 협상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각국 민중들의 주권을 약화하고 건강형평성을 악화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규탄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뻔뻔한 기업에 봉사하는 RCEP을 거부하고, 정부의 주권을 지키면서 민중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협력을 위한 대안적 RCEP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RCEP의 신자유주의적 자유 무역과 투자 모델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RCEP은,

- 바닥으로의 경주를 촉진할 것이다.
- 우리의 삶과 건강을 좌우하는 정책을 결정할 민중들의 권리를 부정할 것이다.
- 인권, 특히 건강권보다 상업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도록 할 것이다.
- 민중의 의사결정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이다.
- 21세기 지구의 민중들에게 가장 큰 위협인 기후 변화를 심화할 것이다.
- 여성의 삶과 생활, 그리고 다른 취약한 집단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고용불안을 악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선주민의 집단학살을 영속화할 것이다.
- 식품, 전통의약품, 생물다양성에 대한 민중의 주권을 부정할 것이다.
- 의약품에 대한 초과이윤을 달성할 제약회사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지불가능한 치료를 박탈할 것이다.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민영화와 초국적 기업들의 폭리 취득을 촉진할 것이다.
- 건강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기업의 로비와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 비전염성 질환의 주된 원인인 술, 담배, 설탕, 가공식품산업의 활동을 묵인할 것이다.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통해 정부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주권을 위협할 것이다.

- 관세 인하와 법인세 회피로 세수를 잠식할 것이다.
- 신뢰할 수 없는 민간 기업이 활용, 남용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할 것이다.
- 모두의 건강을 위한 세상과 사회정의, 지구의 생존을 향한 길에 또 다른 장벽을 세울 것이다.

진정한 협력이 민중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우리는 알마아타의 원칙과 일치하는 대안적 RCEP을 요구하며 이는 다음의 원칙들을 가진다.

- 국제적 인권과 건강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구
- 양질의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인력
- 건강과 삶에 대한 개인적, 공동체적 자기결정을 촉매하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권력강화
- 재난적 기후변화의 시작을 실제로 반전시키기 위한 목표의 달성
- 공적 보건의료정책을 통한 지불가능한 의약품 접근성 보장
- 식량주권, 강력한 식품안전기준, 건강기반 상품표시제
- 유독한 농약 금지와 안전한 농업 환경
- UN의 ‘초국적 기업의 인권 이행원칙’의 강력한 적용을 포함해 기업, 특히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강제가능한 의무 부과
- 건강 정보에 대한 민중의 권리 보장
- RCEP 협상과 실행과정에서 공개성, 참여, 책무성
- 대안적 RCEP이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 전후에 참여적 인권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 수행